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전황
2~3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이스라엘과 독일의
유대 관계
4면

요르단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5면

시온주의의
모순
6~7면

의대 정원 확대 논란 14면
공공의료 체계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15면

세월호 참사
10주기
16, 15면



관련 기사 14~15면

철수했다는 이스라엘군, 드론과 전투기로 여전히 가자 폭격 중

네타냐후: “라파흐 진입 날짜를 잡았다”

김인식

4월 7일(이하 현지 시각)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에서 1개 여단만 빼고 병력을 대부분 철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장군들은 “전술적 이유”로 철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네타냐후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라마단” 때문에 라파흐 공격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이스라엘 안팎에서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압력이 증대돼 왔다. 특히, 이스라엘군이 4월 1일 서방 구호단체 직원들을 고의로 살해하자 바이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야 했다.

한편,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는 연일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요르단 정보총국 전 국장 사우드 알샤라파트는 이렇게 말했다.

“요르단은 골치 아픈 처지에 있다. ... 현재의 사태 전개 속도를 유지해서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지 않게 할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워싱턴 포스트》 3월 28일 자)

3월 30일 프랑스·이집트·요르단의 외무장관들이, 3월 31일에는 이례적으로 이집트와 이란의 외무장관들이 휴전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한 것도 이런 압력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국내에서도 대규모 반네타냐후 운동이 벌어져 네타냐후의 정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3월 31일에 이어 4월 7일에도 10만 명이 거리로 나와 인질 석방과 네타냐후 내각 퇴진을 요구했다.

두 야당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이스라엘 제 1야당인 예시 아티드 대표)와 베니 간츠(현재 전시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통합당 지도자)는 “즉각 선거 실시”를 요구했다.

반면 국가통합당 소속이자 전 총리 기드온 사아르는 조기 선거 실시와 “두 국가 방안” 지지에 반대해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극우 시온주의자와 파시스트들은 네타냐후



“가자지구에 뚫린 지옥의 구렁이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UN 팔레스타인난민기구 지도자가 이 사진을 공개하며 한 말

가 압력에 굴복하면 내각에서 사퇴하겠다고 압박했다.

철수 이유

이스라엘군 철수 결정의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가자지구 북부에서는 여전히 2개 여단이 남아 군사 작전을 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분할해 팔레스타인인들이 북부로 귀환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서 횡단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또, 드론과 전투기로 여전히 가자지구 곳곳을 폭격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이스라엘군 철수의 “전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그

러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만 큼은 분명하다.

특히, 이스라엘군이 애초의 군사적 목표(하마스 분쇄와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를 달성했기 때문에 가자 남부에서 철수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 남부 철수는 “라파흐 지상전을 대비하기 위한 병력 재배치”일 가능성이 있다(알자지라, 4월 8일 자).

실제로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라파흐 작전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이 철수해 다음 임무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임무의 사례를 알지파 작전에서 봤고, 라파흐에서도 다음 임무를 보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스라엘군의 가자 남부 철수

는 라파흐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라파흐 피란민들을 소개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스라엘은 해안을 따라 대규모 텐트 도시들을 세워 라파흐 거주 민간인을 소개하려고 계획하고 있음이 얼마 전에 폭로된 적이 있다. 가자시티 남쪽 끝에서 라파흐 북쪽 끝까지 각각 텐트 2만 5000개를 포함하는 15개 부지를 계획했다는 것이다.(<월 스트리트 저널>, 2월 12일 자) 팔레스타인인들을 영원히 가두는 인종 격리 계획이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철수하자 라파흐로 피난 갔던 주민들이 칸 유니스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칸 유니스에는 “죽음의 냄새”만 자욱하다.

라파흐 지상전이 시작되면 끔찍한 대학살이 자행될 것이다. 그럼에도 네타냐후는 지상전을 강행하라는 압력을 극우로부터 받고 있다.

4월 7일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이렇게 경고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라파흐에 대한 대규모 공세로 하마스를 제거하는 일 없이 전쟁을 종료하기로 결정한다면, 총리 권한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다음 날 네타냐후는 라파흐 진입 “날짜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반대 시위대도 팔레스타인 점령 자체는 지지한다

이란에 의한 확전?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것에 반발해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이란으로 전쟁을 확대하려고 애쓴다. 그리되면 미국 등 서방이 다시 화끈하게 지지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4월 1일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간부 등 최소 11명을 죽였다.

이스라엘군의 가자 남부 철수가 이란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병력을 재배치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곤경에 처해 있는 듯하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신용이 손상될 것이다. 이란

은 동맹과 적 모두의 눈에 약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란은 이스라엘이나 미국과의 직접적인 전쟁을 피해 왔다. 이란 자본주의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까 봐 우려해서다. 그래서 충돌을 한계점 이하로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 때문에 계속 전쟁 확대를 시도해도 보복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이스라엘에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고위 장성 암살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지만 이란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이란에게는] 많은 옵션이 있지만 문제가 있다. ... [그래서] 작은 막대기를 휘두르며 큰소리를 친다.”(알자지라, 4월 8일 자)

아랍 다국적군의 가자 파견? “시온주의의 새로운 함정”

네타냐후 정부의 가자전쟁에 대한 국내 외 비판이 커지자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아랍 다국적 군대를 가자지구

에 파견하는안을 미국과 논의했다. 가자지구의 법과 질서를 담당하고 인도적 구호 전달을 호위하며 미국이 가자지구 해안에 건설하려는 임시 부두를 지키기 위해 아랍 다국적 군대를 한정된 기간에 가자지구에 주둔시키자는 것이다.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 등 세 개 아랍 국가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아닌 대안을 만들어내려고 아랍 군대의 주둔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 연합’은 “가자지구를 침공한 군대는 모두 점령군으로 간주할 것이고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시온주의가 현지에서 크게 실패한 뒤 일부 아랍 국가들을 자신들의 계획과 프로젝트에 끌어들이려는 제안을 지지할 위험성[을 경고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온주의의 새로운 함정이자 기만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시온주의자들은 가자지구의 거대한 수렁에 빠져 있는 점령군을 구해 내기 위해 몇몇 아랍 국가들과 그 지역의 일부 수단들에 의지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패배를 면하고자 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자지구를 운영할 지도자와 제도를 선택할 능력이 있다.”

한 아랍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갈란트는 아랍 국가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호송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파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이스라엘 TV 뉴스 채널 I24NEWS, 3월 31일 자)

하마스가 휴전 협상의 조건을 발표하다

미국 등 서방 강대국 지도자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해 매우 모순되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신호들을 거의 날마다 쏟아내고 있다.

휴전 협상 문제도 그런 사례다. 서방 지도자들이 말하는 휴전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대표 저항 조직 하마스의 협상이 성사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레바논에 있는 하마스의 대변인 오사마 함단은 4월 4일 휴전

협상의 조건을 발표했다.

함단은 “완전한 휴전, 점령군의 가자지구 철수, 피난민들의 기존 거주지로 귀환, 주민의 이동 자유, 구호와 대피소 제공, 상당 규모의 인질 교환 협상”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협상에 아무 진척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조건은 이미 “3월 14일에 제시”한 것이고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뻔한 거짓말 미국은 라파흐 지상전을 통제하길 바랄 뿐 반대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라파흐 작전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과 이스라엘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고 싶어 한다.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군의 라파흐 지상전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바이든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받고 있어 적어도 가자지구의 학살을 줄이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바이든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라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4월 1일 미국은 이스라엘 군 당국자들과 영상으로 라파흐 작전 준비를 논의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11은 미군 합참 의장 찰스 브라운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헤르지 할레비에게 네 가지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1. 이스라엘군은 라파흐 지역을 격리시키고 출입을 통제한다.

2. 기술적 수단들(감시 카메라와 센서)을 통해 이집트 쪽 국경을 단단히 폐

쇄한다.

3.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표적물들에 한정되고 집중된 급습과 공습을 한다.

4. 미국과 합동 작전 상황실을 차려 가자지구 남부에서의 군사 작전을 조율한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자국의 통제를 받으며 전쟁을 벌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이 벌이는 온갖 종류의 전쟁 범죄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공격 이후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해 왔을 뿐 아니라 가자지구에 대한 정보 수집도 크게 늘렸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이스라엘과 공유하고 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는 4월 2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정보 협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정보 공유가 미국이 제공한 무기 못지 않게 가자지구에서 많은 민간인들을 죽게 만들어 왔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종학살과 이슬람 혐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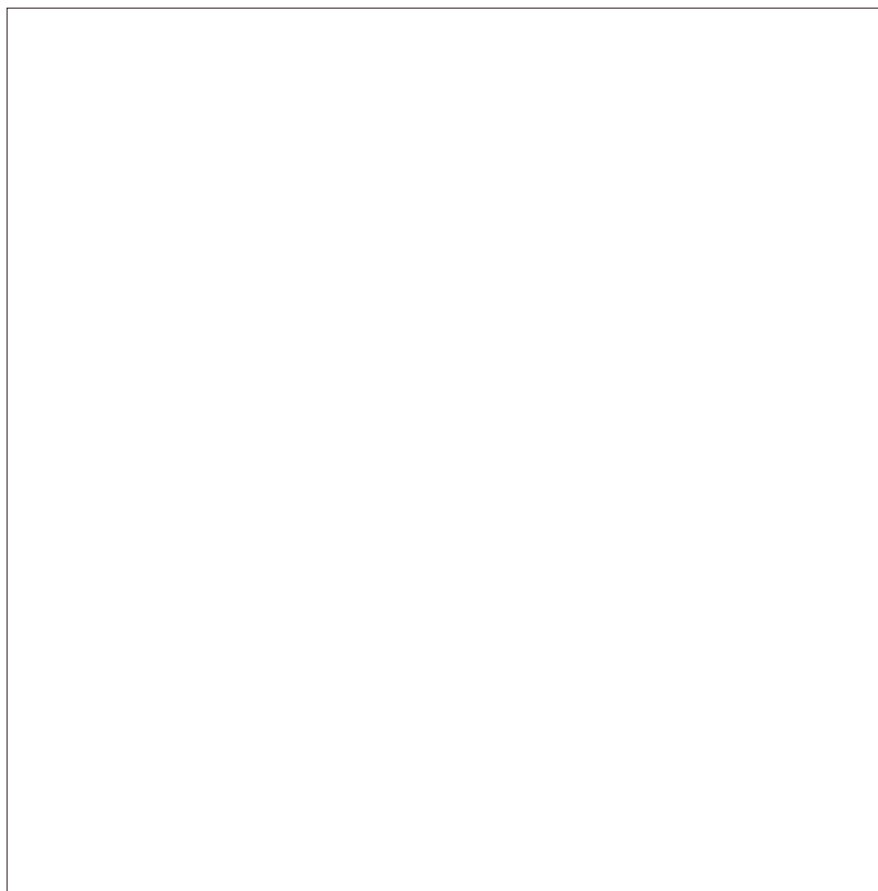
이스라엘군이 구호단체 월드센트럴 키친(WCK)의 직원들을 학살한 사건은 지난 6개월 동안 가자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든 이스라엘의 학살 기구가 얼마나 무자비한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그 학살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져서 영국에서는 보수당마저 분열하고 있다. 윈스턴 처칠의 외손자 니컬러스 솜스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극렬한 극우인 수엘라 브래버먼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의 학살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

월드센트럴키친 직원 학살의 여파로 심지어 독일도 압력을 받고 있다. 그 전까지 올라프 솔츠 정부는 네타냐후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이스라엘에 더 많은 무기를 수출했다. 그러나 그러면서 갈수록 커지는 외교적 대가를 치렀다.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차관 닐스아넨은 이렇게 시인했다. “독일은 아랍 세계에서 소프트 파워를 상당히 잃었다.”

독일은 6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한다. 2008년 3월 당시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이스라엘 국회에서 한 유명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독일의 특별한 역사적 책임은 … 독일 국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독일 총리인 저에게 이스라엘의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주간지 〈슈피겔〉이 지적했듯이, “독일의 국시”에 관한 정식화는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메르켈이 남긴 유산의 하나가 됐다.”

친이스라엘 ‘국시’

그러나 이스라엘과 독일연방공화국(1949년 독일을 점령한 서방 열강이 세운 서독)의 관계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독의 초대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는 홀로코스트 이후 독일이 국제적으로 다시 인정받으려면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봤다. 아데나워는 그러한 견해를 유대인 혐오가 묻어나는 언사로 표현했다. “유대인의 영향력, 특히 그들이 미국에서 가진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1953년에 합의된 독일



독일 올라프 솔츠(왼쪽) 정부는 팔레스타인을 반대하고 네타냐후(오른쪽)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1960년대 초부터
독일과 이스라엘의
군사 협력에서 핵심적이 된
측면 하나는
비밀 핵 전력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의 배상금은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온 유대인 난민 50만 명을 흡수하던 상황에서 이스라엘 경제를 부양시켜 줬다. 1957년 이후 서독은 이스라엘의 주요 무기 공급국이 됐다.

역사가 애덤 투즈는 무기가 메르켈의 대(對)이스라엘 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강조한다.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독일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정말로 중요한 무기들은 크고 무겁고, 설계와 수송에 여러 해가 걸리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무기다. 그것은 바로 잠수함이다. 1990년대 이래로 독일의 조선소들은 이스라엘 잠수함 함대의 주요 도급 업체가 됐다.”

독일이 건조한 6척의 잠수함은 핵탄두(이스라엘은 약 9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를 탑재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1960년대 초부터 독일과 이스라엘의 군사 협력에서 핵심적이 된 측면 하나는 이런 비밀 핵 전력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고 비난했고, 메르켈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가할 위협을 우려했다고 투즈는 강조한다.

한편, 독일 국내에서는 친이스라엘 “국시”에 따라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

가 유대인 혐오적인 것으로 규정되고 탄압받았다. 2019년 독일 의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 투자 철회, 제재 운동(BDS)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7일 공격 이래로 독일의 문화·학술 기관들은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사람을 모두 제척하는 광적인 공세에 몰두했다. 특히 망신스러운 사례는 막스 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가 레바논계 오스트리아인 인류학자 가산 하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다.

광적인

독일 학계의 핵심부도 “국시”를 따르고 있다. 독일의 살아 있는 가장 유명한 철학자이자 프랑크푸르트 마르크스주의 학파의 계승자인 위르겐 하버마스는 두 동료와 공동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겪게 될 불행은 매우 우려스럽지만, [하마스의 — 역자] 인종 학살 의도를 이스라엘의 행동 탓으로 돌리는 것은 모든 판단 기준을 내던지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더 진정한 좌파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낸시 프레이저는 얼마 전 쾰른 대학에서 초빙 교수 지위를 박탈당했다. 그녀의 죄는 무엇이었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팔레스타인을 위한 철학”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 연명한 것이었다. 유대인인 프레이저가 제척당한 것을 계기로 마침내 독일에서도 몇몇 저명한 학자들이 항의에 나섰다.

그러나 매카시즘(반공주의 마녀사냥) 열풍이 휩쓴 1950년대의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억압이 사회에 깊숙히 파고들어 있다. 팔레스타인에 동정적이라는 이유로 지역 문화 센터들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있다. 이것은 단지 독일 제국주의와 이스라엘 정착자 식민주의의 전략적 동맹 때문만이 아니다.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억압을 강화하라고 주류 정당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종 학살과 이슬람 혐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번역 이원웅

요르단

급진적인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보름 넘게 이어지다

요르단에서 전투적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보름 넘게 연일 계속되고 있다.

수도 암만에서는 매일 3000~5000명이 타라위(라마단 기간 야간 특별 예배) 직후 거리로 나와 이스라엘 대사관을 포위하고 시위를 벌였다. 무슬림의 휴일인 금요일에는 암만 외에도 10여 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 참가한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요르단은 시위가 흔한 나라가 아닙니다. 시위가 대개 불허되기 때문에 행동이 조직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는 연일 많은 사람을 거리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 특히 청년들의 분노가 거세다. 4월 7일 시위에 나온 32세 청년 아흐메드 알투베이기는 외신에 이렇게 전했다. “속 편히 이드 알피트르[라마단의 끝을 기리는 무슬림 명절]를 쉴 수는 없어요. 그런다면 수치스런 일이겠죠.

“이 시위는 가자지구 동포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시위대는 요르단 왕가를 정면 비판하고 있다. 한 시위 참가자는 알자지라에 이렇게 전했다.

“지금 우리는 국왕에게 제대로 한마디 하고 있어요. ‘후세인[국왕]의 아들 압둘라[왕세자야,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을 원치 않는다!’ 같은 구호가 나오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국왕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고 배우며 자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국왕에 대한 비판이 훨씬 흔하게 들립니다.”

시위대는 요르단 정권이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하고 지금도 진행 중인 대(對)이스라엘 교역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요르단 정권이 대미(對美) 관계를 재고하라는 요구도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알자지라 특파원 보도).

왕가

이런 전개는 미국의 충실한 동맹인 요르단 왕가를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간 요르단 정권은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말을 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하는 시늉을 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미군이 요르



자국 정권에 맞선 아랍 대중의 저항이 커져야 한다. 3월 말 요르단 수도 암만

단 영토에 대규모로 주둔하도록 허용하며 그런 미국에게서 지난해에만 4억 2500만 달러의 군사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요르단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팔레스타인계여서 팔레스타인 연대 정서가 강력하고, 이스라엘의 학살에 대한 분노가 특히 크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부터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정권은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막으려 위선을 떨어 왔다. 암만에서 주 1회 금요일에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를 허용하고, 국왕 자신이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공중 투하하는 ‘쇼’를 벌이는 등 몇몇 조치를 취했다.

동시에 정권은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대가 팔레스타인 깃발을 드는 것은 불허하고, 시위대에 공안 첩자를 침투시켜 공작을 펴고, 새벽까지 계속 시위

하는 소규모 대열을 폭력 연행하는 등 탄압도 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구소 ‘아랍 센터’의 소장 이마드 하르브는 알자지라에 이렇게 전했다. “그간 폭력 진압이 여러 차례 있었다. 요르단의 무크하라바트(공안 경찰)는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무크하라바트는 도를 넘는 강경 진압을 꺼리고 있으며, 줄타기를 하면서 적정 수위를 찾고 있다. 이것이 가자지구에 연대하는 시위임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의 강온 양면책에도 불구하고 전투적인 시위가 지속되자, 이제 정권은 이 시위가 하마스의 사주에 놀아난 것이라고 비방한다.

4월 2일 요르단 정부 관계자 한 명은 현지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요르단 밖

의 하마스와 협력하는 요르단 내 ‘이슬람주의 운동’ 지도자들이 요르단인들을 가자지구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

상원의장 파이살 알파예즈는 4월 4일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국론 분열의 장이 되는 것, 요르단 국가에 대한 비방·반역·범죄를 획책하는 외세의 앞잡이들이 공론장에서 활개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들은 하마스 지도자 칼레드 메살이 3월 말에 아랍 대중에게 이스라엘 점령에 맞선 대규모 연대 시위를 벌여 달라고 호소한 것을 문제 삼는다.

사주?

이런 상황에서 유감스럽게도, 하마스는 지난주에 요르단 정권을 감싸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 하마스는 요르단 국왕이 팔레스타인에 연대해 준 데에 감사를 표하고 요르단 무슬림형제단과의 연계를 부인하며 “우리 안의 오해와 의견을 모두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하마스는 요르단 정권에 도전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 열강이 중무장시킨 이스라엘을 패퇴시키려면 가자지구에서 군사적 저항을 지속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기대고 있는 중동 제국주의 시스템 자체를 흔들어야 한다.(관련 기사 본지 493호 ‘이렇게 생각한대 팔레스타인 독립 투쟁의 세 기동’)

그러려면 요르단 등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자국의 친제국주의 통치자들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대중적 저항이 꼭 필요하다. 그런 저항은 어떤 총칼보다도 더 심각하게 이스라엘을 위협할 것이다.

요르단 정권을 적대하기를 회피하는 입장은 그런 저항을 건설하는 데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낸다. 그보다는 팔레스타인인들에 연대하는 투쟁을 각국 통치자들에 맞서는 대중 반란과 연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요르단의 시위가 계속 굳건히 이어지고 더 심화돼, 중동을 휩쓰는 항쟁의 마중물 구실을 하길 바란다.

김준호

이스라엘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는 지난주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가 말한 “미래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정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부가 이끄는 국가가 위기로 분열돼 있다. 위기가 어찌나 깊었던지, 그 갈등의 한 축은 그 위기가 “민주적인” 유대인 국가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표면적으로 그 위기는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정치 체제 개혁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정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대법원의 권한을, 서안지구에 대한 자신의 야심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고 제거하려 한다.

이것을 관철시킨다면 예컨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의 불법 정착촌 초소들을 “합법화”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그에 따라 정착촌을 더 많이 짓기도 쉬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의 일부는 정부의 사법 개혁안이 팔레스타인 점령을 법적·민주적으로 정당화하는 장치를 파괴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을 미국과 충돌하게 만들 것이라고 본다. 이스라엘이 의존하고, 이스라엘이 충실하게 그 이익을 옹호하고자 해 왔던 미국을 말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사회이고 미국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보장해 주려 한다는 환상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국가의 일부가 다른 일부를 상대로 승리해서 벤그비르 같은 자들이 패배하는 편이 더 낫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더 큰 물음도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인종 분리 국가가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위기를 낳은 모순은 이스라엘 건국의 토대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건국자들은 19세기 후반



“유대인이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총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정착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반대 시위 시온주의의 모순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제국주의자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기도 한다. 영국의 언론인 닉 클라크가 쓴 이 기사는 네타냐후의 사법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부상하던 2023년 4월 17일에 쓰였지만, 현재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유용하다.

과 20세기 초반 유럽의 끔찍한 유대인 박해를 목도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배타적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열망을 품게 됐다.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시온주의라는 정치적 프로젝트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를 실현하려면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빼앗아서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 했다.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로 만드려던 시온주의 운동가들은 아랍인들을 몰아내려고 초기부터 폭력을 사용했고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아랍인들의 권리를 부정하려고 인종차별적인 거짓말을 퍼뜨렸다. 또, 시온주의 운동 지도자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세우려면 제국주의 강대국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시온주의 운동 지도자의 한 명인 카임 와이츠만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인을 단속하는 것을 돕겠다는 제안으로 영국 정부의 환심

을 사려 했다.

영국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영국은 아랍 정치 지도자들을 달래고 팔레스타인 주민의 반란을 방지할 필요도 있었다. 영국은 영국 제국과 시온주의가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와 독립 국가 수립 열망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야 했다.

그 결과가 바로 1917년 벨푸어 선언에 담긴 모순이다. 벨푸어 선언에서 영국은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의 민족적 고향을 설립할 것”을 약속했다. 동시에 벨푸어 선언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비유대인 사회의 시민적·종교적 권리를 악화시킬 어떠한 일도 일어나선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벨푸어 선언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달리 국가를 약속하지 않았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이 땅

정착촌을 유지하기 위한
무자비한 폭력을
지지하는 정당들이
갈수록 이스라엘 정치를
지배하게 됐다

과 집을 잃게 될 것임을 뜻했다.

이후 수십 년간 시온주의 운동은 팔레스타인에서 영국 제국의 도구 구실을 했다. 시온주의 운동의 공식 무장 조직인 하가나는 영국 군인들과 함께 아랍 주민들을 탄압했고, 1936년 아랍인들의 반란을 진압했다. 그러나 시온주의자들 사이에서는 팔레스타인에 국가를 세운다는 자신들의 야심이 영국 제국주의의 필요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갈수록 커졌다.

‘6일 전쟁’

시온주의 운동의 공식 지도부는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제한하려는 영국의 시도를 배신이라고 맹비난했다. 1948년 영국은 팔레스타인에서 철수해야 했고, 팔레스타인 땅 대부분을 신생 이스라엘 국가에 할애하는 분할안을 작성했다. 그러나 시온주의자들은 그 분할안조차 거부하고 무력과 인종 청소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 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위기와 유사성이 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시온주의자들의 야심이, 이스라엘이 의존하는 제국주의 강대국의 필요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국가, 사회, 정치의 모든 것이 미국 주도 제국주의 질서로의 완전한 통합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부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최고 집행자 구실을 하는 것에 그들의 미래가 있다고 봤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그런 구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1967년 ‘6일 전쟁’에서 입증했다.

그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또,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도전한 아랍 민족주의 정권들의 군대를 패퇴시켰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어느 동맹국보다 막대한 액수의 군사 원조를 보상으로 제공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서 이스라엘을 어찌나 중시했던지, 미국에는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군사적 우위를 지키는 것

을 행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법이 있을 정도다.

미국이 지원하는 돈은 오늘날 이스라엘 경제의 핵심 부문인 무기 산업과 첨단 기술 산업으로 직·간접적으로 흘러들어 간다.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생산물을 다시 미국과 세계 곳곳에 수출한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긴장은 여전하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대인 시민들은 팔레스타인인에게서 강탈한 땅 위에 살고 있고, 팔레스타인에게는 없는 특권을 누리는 사회에 살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과 독립을 쟁취하는 투쟁은 그런 이스라엘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 하면서 이스라엘 정치가 계속 우경화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신과 나란히 공존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허용할 수 없다. 그런 국가를 허용하려면 적어도 서안지구의 일부를 포기해야 할 텐데 그곳에는 이미 이스라엘 시민 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유대인들의 배타적 국가

그러나 이스라엘은 단일한 국가 안에서 팔레스타인인에게 동등한 민주적 권리를 허용할 수도 없다. 그것은 유대인만의 국가라는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어느 주요 정치 세력도 정착촌을 포기하겠다는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가자지구의 통제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못한다. 정착촌을 유지하기 위한 무자비한 폭력을 지지하는 정당들이 갈수록 이스라엘 정치를 지배하게 됐다.

반면, 미국은 팔레스타인 지도자들과 아랍 동맹국들의 지배자들을 안심시키려고 미래의 팔레스타인 소국가를 약속하는 “두 국가 방안”을 이용한다. 이는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서 몇몇 갈등을 낳았다. 그러나 역대 이스라엘의 어느 정부도 이번 이스라엘 정부처럼 미국의 전략과 갈라서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적이 없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서안지구에서 확대되고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

2017년, [극우] 정당 ‘유대인의 고향’ 대표 베잘렐 스모트리치는 이스라엘을 위한 “과감한 계획”을 작성했다. 스모트리치는 시온주의와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이 공존할 수 없고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자발적으로든 힘을 통해서든” 굴복해야 한다고 썼다. 스모트리치는 이스라엘이 모든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영구적 소유권을 선언하고 서안지구에 “깊숙히 들어가” 새로운 도시와 정착촌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으로 스모트리치가 제시한 것은 동등한 권리를 부정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삶을 그냥 받아들이거나, 일정한 돈을 받고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이다. 아니면 투쟁을 계속하다 살해당하는 것이다. 스모트리치는 이 모든 것이 국가 작동 방식에 관한 “널리 인정되는 원리에서 일탈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이런 전망을 따른다면 이스라엘은 미국이나 “국제 사회”의 지시를 더는 따르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나머지 세계가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스모트리치는 이제 이스라엘의 재무장관이 됐고, 사태가 대체로 계획대로 흘러갈 거라고 확신하는 듯하다.

미국은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정부를 다잡을 수 있었다. 네타냐후는 미국의 비판과, 이스라엘 국가와 사회의 상당한 일부의 반발에 직면해 사법 개혁을 일시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그런 조처는 위기의 근원, 즉 시온주의의 내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다.

스모트리치와 벤그비르 — 그리고 갈수록 네타냐후도 — 모든 팔레스타인 영토를 차지해야 할, 시온주의의 필요를 표현하는 인물들이다. 그들에 맞서는 반대파와 이스라엘 국가의 상당한 일부는



최근 이집트 카이로 언론회관 앞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미국 제국주의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시온주의의 필요를 표현한다. 양측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고, 그 위기는 유혈 충돌로 귀결될지도 모른다.

근본적인 위기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 제국주의와 단절하고 팔레스타인인을 민주적인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하는 단일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네타냐후와 그의 반대자들 모두 이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맞서는 그들 모두 이스라엘 국가를 중심으로 뭉칠 것이다. 네타냐후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 또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기는커녕 점령을 유지하는 데에 힘을 쏟는다.

네타냐후의 사법 개혁에 항의해 소집에 불응했던 예비군들은 지난주 네타냐후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분쇄하려고 동원령을 내리자 군말 없이 거기에 응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이 “민주주의”를 상실하면 점령지를

통제할 능력이 약화돼 이스라엘의 “안보”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의 존재가 어느 때보다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의 해방은 이스라엘 내부로부터 나올 수 없다. 이 인종차별 국가는 저항으로 분쇄돼야 하고, 이스라엘이 의존하는 제국주의 질서는 중동 전역의 반란을 통해 무너져야 한다.

출처 Nick Clark, 'Israel and the contradictions of Zionism' (2023, 4, 17) / 번역 오수민

소책자



신간



팔레스타인 —
저항, 혁명, 해방을 향한 투쟁

노동자연대, 68쪽, 4,000원
(영어판도 판매합니다)

※ 문의: 02-2271-2395 wsorg@ws.or.kr

연속혁명은 무엇이고 어떻게 팔레스타인 해방 문제에 적용되는가

최일봉 노동자연대 국제연락간사, 운영위원

먼저 '연속혁명론'의 말뜻부터 살펴보자. 연속혁명론은 연속혁명 이론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연속혁명은 이론이 아니라 전략이다.

이론은 법칙과 원리·원칙의 체계다. 반면 전략은 계획, 기본 계획이다.

러시아 혁명 이래로 연속혁명이 일어난 적이 없다. 혁명이 연속되지 않고 중간에 멈췄다. 연속혁명이 '이론'이라면 그러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연속혁명은 '전략'인데 아무도 그런 전략을 세우지 않았거나, 그런 전략을 세운 세력이 너무 미약했기에 실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1927년 중국 혁명은 패배했다. 1949년 중국 혁명은 노동계급의 사회주의적 혁명이 아니라 중단계급의 민족 해방 혁명이었고, 1959년 쿠바 혁명도 마찬가지였다.

그런가 하면 1989년 동유럽 혁명은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이런 혁명들은 노동계급의 사회주의 지향 혁명으로 연속되지 않고 민족 해방이나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서 멈췄다.

왜냐하면 이런 혁명들을 이끈 지도부들이 연속혁명 전략을 세우고 그런 전략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27년 중국 공산당은 노동계급에 기반을 둔 혁명적 사회주의정당이였다. 하지만 소련과 코민테른의 스탈린주의적 지도부의 강요와 그들 자신의 경험 부족으로 우물쭈물하고 주저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쳤을 뿐 아니라 장제스와 왕징웨이에게 의해 차례차례로 배신당하며 거의 궤멸당했다.

1949년 중국 혁명의 지도부 중국 공산당은 지식인 기반의 정당으로 바뀌

었다. 그들은 미국 제국주의와 부패한 국내 친미 세력을 쫓아내고 국가자본주의적 축적을 추진할 국민 국가를 건설하는 데 헌신해 중단계급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지주제도 폐지를 공약해 농민의 지지를 받았다.

1959년 쿠바 혁명의 지도부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도 중단계급지식인들의 정당을 이끌고 미국과 부패한 친미 세력을 쫓아내고 쿠바 국가자본주의를 건설했다.

1989년 스탈린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동유럽 지식인들과 도시 중단계급은 국가자본주의를 '민영화'(사유화)하고 세계 시장에 개방하고자 정치적 민주주의를 구현했다.

이런(1949, 1959, 1989) 혁명들에서 노동계급은 극도로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구실만을 했다. 왜냐하면 혁명 지도부들이 그런 전략을 세워 실행했기 때문이다. 그 지도자들은 민족 독립과 지주제도 폐지, 아니면 정치적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트로츠키 정설주의자들은 트로츠키를 따라 연속혁명을 이론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1949년 중국 혁명과 1959년 쿠바 혁명의 성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1949년 중국과 1959년 쿠바에서 연속혁명의 원동력은 작용하지 않았고(특히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을 위한 혁명적 행동이 없었다), 카스트로와 마오쩌둥의 정당들도 연속혁명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트로츠키 정설주의자들은 중국과 쿠바의 혁명들로 '노동자 국가'가 세워졌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급이 능동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어도 노동자 국가가 세워지다니 대단한 신비주의가 아닐 수 없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은 연속혁명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연속혁명: 민주주의의 과업들을 노동자 혁명으로 해결

그러나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은 무엇보다 노동계급이 자체의 민주적 권력 기구(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로 불렸다)를 기반으로 권력을 잡고 그 노동자 권력을 통해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지주제도 폐지, 소수민족 해방, 그리고 생산의 노동자 통제를 이룩했다. 즉, 사회주의 혁명으로 민주주의의 과업들도 수행했던 것이다.

바로 이를 두고 연속혁명이라고 부른다. 2월 혁명이 10월 혁명으로 연속된 것뿐 아니라, 무엇보다 2월 혁명으로 성취되지 못한 것들을 10월 혁명이 성취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연속혁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2월에서 10월까지는 연속혁명의 원동력(특히, 노동계급의 소비에트 활동과 농민의 토지 장악)이 근저에서 작용하던 기간이었지만, 연속혁명 자체는 10월 혁명이였다.

그래서 레닌은 1921년 10월 14일에 발표한 '10월 혁명 4주년 기념일'이라는 <프라우다> 지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부르주아적·민주주의적 개혁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 즉 사회주의 혁명의 부산물이라고 말했고 행동으로 입증했다." 같은 글에서 레닌

은 "위대한 10월 혁명이 일으킨 농업 개혁"이라는 말도 하고 있다.

요컨대 연속혁명 전략이란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해서, 미해결의 역사적 숙제들인 국가 독립이나 정치적 민주주의나 지주제도 폐지, 소수민족 자유화 등을 함께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연속혁명 전략과 반대되는 전략을 두고 단계혁명 전략이라고 한다. 개혁 전략은 또 다른 것인데, 왜냐하면 단계혁명 전략은 그래도 혁명가들이 추구하는 것인 반면, 개혁 전략은 개혁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명적 상황이 심화돼서 노동계급이 자체의 민주적 권력 기구를 세우고 정치 권력 장악을 위협하면, 개혁주의자들과 단계혁명론자들은 서로 수렴할 공산이 크다. 1917년 러시아를 비롯한 역사적 경험들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1917년 2월 혁명 이후 10월 혁명에 이르기까지 단계혁명론자들인 멘셰비키당은 임시정부의 부르주아 개혁주의자들과 유착해 있었다. 그러느라고 노동계급이 하고 있던 결정적 구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국 10월 혁명을 팔짱 끼고 멀뚱멀뚱 바라보았다.



트로츠키는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으로 민주주의적 과업도 해결할 수 있다는 연속혁명 전략을 제시했다



1925년 중국 노동자 파업 1920년대 중국에서 단계혁명이나 연속혁명이라는 실로 중요한 문제였다

민주 혁명 선행론이 제기되는 맥락

이제 연속혁명 문제가 제기되는 맥락을 살펴보자. 혁명이나 개혁이나 하는 논쟁은 혁명가와 개혁주의자 사이에 일어나는 반면, 연속혁명이나 단계혁명이나 하는 논쟁은 혁명가들 사이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연속혁명이 적절하나 아니냐 하는 논쟁은 혁명가들 일각에서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 전에 민주주의 혁명이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을 맥락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혁명의 유형 중에 사회주의 혁명이 있고, 연속혁명이 있고, 또 무슨 혁명, 무슨 혁명 등이 있는 게 아니다. 사회주의 혁명, 즉 노동자 혁명이 가능한데도 그 전에 반드시 민주주의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단계혁명론자들이 존재할 때 혁명의 목표와 수단들을 둘러싸고 연속혁명 전략을 제안해야 하는 것이다.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혁명이나 개혁이나 하는 논쟁이 거의 없었다. 개혁주의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좌파에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어떤 종류의 혁명이나를 두고 논쟁했다. 그러나 모두 단계혁명론을 당연히 하며 그 안에서 자기들 나름의 전략을 주장했다. 먼저 미국의 간섭으로부터 국가(자)주권을 확립할것인가(NL), 아

니면 먼저 재벌을 대항하지 않는 민중(노동자와 중간계층들)의 정부를 세울 것인가(PD) 하는 게 핵심 쟁점이었다.

그러나 단계혁명론은 민족해방혁명론(NL)이든 민중민주혁명론(PD)이든 노동자 권력을 당면한 역사적 의제에 올려놓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모두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을 뭉뚱그려 혁명의 주체로 보는 민중주의를 넘어서지 못했다. 따라서 당시에는 연속혁명 전략이 주창될 만했다.(그러나 노동계급 투쟁이 가장 고양되던 1989년 말 동유럽 스탈린주의 체제 붕괴 문제가 엄습하고 압도했다.)

오늘날 NL과 PD는 대부분 개혁주의자들이 됐다. 극소수가 1980년대처럼 혁명적인 채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극도로 스탈린주의적이다.

그래서 오늘날 좌파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혁명이나 개혁이나가 쟁점이다. 비록 혁명가들이 극소수여서 이 논쟁이 별로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말이다.

하지만 1920년대 중국, 1930년대 프랑스와 스페인, 1970년대 칠레, 1980년대 남아공, 1998~99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단계혁명이나 연속혁명이냐가 실제로 문제가 됐다.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을

포함해 일부 나라들에서는 혁명적 기운이 고양되면, 민주주의 혁명이 선행된 뒤에야 비로소 사회주의 혁명을 일정에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특히, 노동계급이 사회집단들 중 가장 크지 않은 데다 산업 노동자들은 더욱 적은 경우에, 과연 노동계급이 그 자신의 힘만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겠느냐는 타당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남수단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모잠비크, 라이베리아, 앙골라,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예멘, 아이티 등등 세계 최빈국들은 세계 자본이 외면해 온 데다 종족간 분열과 영토전쟁으로 노동계급이 규모가 축소됐을 뿐 아니라 점점 원자화돼 왔다.

그런 곳들의 노동계급은 특히 도시 빈민의 지지를 받아야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물론 도시 빈민의 지지를 받아 국내에서 권력을 장악해도 사회적 위기 해결은 자체적으로 불가능하고 산업이 어느 정도 이상 발달한 나라들의 노동계급 권력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팔레스타인 해방과 연속혁명

비록 세계 최빈국의 하나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팔레스타인의 위기도 이웃 나라(특히 이집트) 노동계급의 행동에 의존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스라엘 산업에 고용된 팔레스타인계 노동계급이 있지만 매우 소수인 데다 주변적 기능만을 한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미국 제국주의에 의해 하이테크로 중무장하고 있어서 팔레스타인인들만으로는 이스라엘의 식민 정착자 지배를 패퇴시킬 수 없다.

게다가 주변 아랍국 정권들은 서방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을 돕는 핵심 세력이 됐다. 이집트 대통령 엘시시의 독재 정권이 라파흐 국경을 폐쇄하고 있는 것을 보라.

요르단 왕 압둘라 2세도 이스라엘,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 미군 3000명을 주둔케 하는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 원조를 받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정도 막대한 석유 수입 일부를 사용해 다른 아랍 정권들을 유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해방되려면 아랍 정권들이 전복돼야 한다.

물론 이란은 하마스에게 자금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이란이든 레바논 헤즈볼라든 지난 반년간 가자의 대학살을 막기 위해 한 일이 거의 없다. 특히 이란 지배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지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이를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 10면으로 이어짐



이집트의 엘시시 독재 정권은 이스라엘을 돕는 핵심 세력이다

▶ 9면에서 이어짐

더구나 지난해 이란 정부는 끈질기게 저항하는 시위대를 누적 통계로 450명이나 살해했다.

하마스가 2012년 시리아 혁명 때 아사드 독재 정권을 비판하자 이란은 하마스를 길들이려고 하마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했었다.

이런 일들은 이란 정권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동맹이 될 수 없음을 뜻한다.(유감이게도 하마스는 이런 이란 정권과 사이 좋게 지내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 해방은 중동 전역의 노동계급과 도시 빈민의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에 달려 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이런 투쟁의 방아쇠 구실을 할 수 있다. 지금 요르단에서 어쩌면 그런 투쟁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조짐이 보인다. 요르단 시위대는 서안지구와의 경계선까지 행진하려 했고, 정권은 보안군을 통해 시위대에 발포했다.

이런 항의가 노동계급의 생계 유지 투쟁과 맞물리면 실로 거대한 대중 투쟁이 일어날 수 있다.



사진 출처: 가가 에브리타임

2011년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의 점거 운동 이집트에서 연속혁명이 일어난다면 팔레스타인인 해방을 위한 길도 열 수 있다

이집트 혁명의 중요성

결정적 전장은 이집트일 것이다. 인구 1억 1000만 명에 취업 노동자만도 3000만 명인 아랍 정치의 핵심부에서 혁명이 다시 일어난다면 가장 중요한 사건일 것이다.

2011년 이집트 혁명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으로부터 몇 년간 성장해 나왔던 것이다. 그리고 타흐리르 광장의 대규모 점거는 광범한 노동자 파업들과 연결되면서 결정적인 원동력을 창출했다. 공장뿐 아니라 항만과 병원, 학교, 공무원 등까지 가세해 나라를 거의 마비시키다시피 함으로써 독재자 무바라크를 물러나게 했다.

국제적으로도 연속

그러나 아쉽게도 혁명가 조직들은 소규모였고, 그 대신에 매우 대규모이고 개혁주의적인 무슬림형제단이 운동의 주도권을 잡아 마침내 집권까지 하게 됐다.

군부는 이슬람주의에 적대적인 세속주의 정치 세력들의 지지를 받아 2013년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의 반혁명으로 수많은 무슬림형제단 단원들과 혁명가들이 학살을 당했다.

하지만 혁명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오래지 않아 “빵, 자유, 사회정의”라는 구호가 다시 울려 퍼질 것이다.

이집트의 민중은 적빈 상태이다. 국민의 3분의 2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 반면 5퍼센트도 안 되는 극소수(군장성, 국가 관료, 기업주 등과 그 가족들)가 국민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 투쟁과 반제국주의를 결합시키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RS)이 이집트에서 재건되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그들의 연속혁명 전략이 성공한다면 이집트 노동계급은 도시 빈민을 이끌고 군부 통치를 타도하고 정치 권력을 잡아, 이집트에 종교의 자유를 포함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의 영향력을 물리치고, 아랍 노동자들의 혁명적 투쟁을 고무하고, 이집트 농민을 족쇄에서 해방케 하는 등의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집트에서 연속혁명이 일어난다면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 등지에서도 틀림없이 연속혁명의 원동력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문의: 02-2271-2395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가입하세요

ws.or.kr/join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ws.or.kr/online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엠코리아 현재호: 서울도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15

가자지구 전쟁 6개월 4.6 집중 행동의 날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투지와 활력을 뽐내다

4월 6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주최한 '가자지구 전쟁 6개월 4.6 집중 행동의 날' 집회와 행진이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이스라엘은 참혹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도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제적 고립이 심해지고 있다. 반면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투지를 불태우며 계속되고 있다.

이런 반년을 보내고 열린 집회·행진은 자신감과 투지가 두드러졌다.

집회 시작 한참 전부터 광화문 D타워 인근은 마치 새학기 캠퍼스처럼 활기가 넘쳤다. 매주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결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합류하는 사람들이 어우러졌다.

학살과 저항의 6개월

집회가 시작되고, 재한 팔레스타인인 나심 씨가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 6개월은 살인·학대·위협·체포·기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진정한 정의의 주인인지 분명히 드러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팔레스타인인들은 서안지구·가자지구·동예루살렘 등 점령된 팔레스타인의 독립이라는 임무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분출하는 '인티파다(항쟁)'로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뒤이은 중학생 이채현 님의 발언은 참가자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울림을 안겨 줬다.

“여러분에게 꿈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가자지구 어린이들은 '부모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면 좋겠다', '동생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하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빛내며 살아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나 큰 어려운 일을 겪고도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일곱 살이든 일흔이든, 기독교 신자든 무슬림이든, 여자든 남자든, 한 명이든 만 명이든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가자지구의 훌륭한 아이들을 위해 함께 외칩시다. Free Free Palestine!”

미국인 무슬림 여성 사미아 씨는 “팔레스타인 해방은 우리 모두의 도덕적 책무”라고 힘주어 발언했다.

“지금 불의에 맞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의 투쟁입니다.



“서방 제국주의의 위협에 맞서 함께 투쟁합시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죽음을 기리며, 76년 전 제주 4·3 항쟁을 기리며 말입니다.

“단결한 민중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합시다.”

노동자연대 김승주 활동가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우리는 팔레스타인 해방으로 가는 역사에 그 어느 때보다 큰 획을 긋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스라엘을 무릎 꿇릴 때까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리로” 나오자고 호소했다.

이집트인 엘겐디 씨는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찬사를 보냈다.

“군부 독재하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참가한 모두에게 ... 요르단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을 포위하고 연일 시위를 벌이는 형제 자매들에게 ... 모로코·튀니지·예멘·스웨덴·말레이시아·파키스탄·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운동에 ...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팔레스타인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모두 당신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당신과 함께 절규합니다. 그 절규를 전 세계에 전할 것입니다. 끝까지 연대합시다!”

발언이 모두 끝나고 반년 동안 함께 연대 운동을 건설한 단체·개인들이 연대 지속의 결의를 담아 성명을 낭독했다.

“인티파다! 인티파다!”

중동·아프리카·유럽·북미·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참가자들이 거리 행진에 나서자, 찌렁찌렁한 구호가 종로 거리에 울려 퍼졌다. “인티파다! 인티파다!”

팔레스타인인 유학생의 우렁찬 항



서울 광화문을 출발해 명동을 지나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까지 행진하는 집회 참가자들(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 도착한 행진 참가자들이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아래)

도와 이집트인 청년들의 힘찬 북소리가 행진을 이끌었다. 참가자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승리를 염원하는 손가락 브이(V)와 다양한 구호가 적힌 팻말을 치켜들고 한국어·영어·아랍어 구호를 연호했다.

많은 참가자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팔레스타인 연대에 진심임을 드러내 보였다. 리플릿 반포와 현수막 들기에 직접 나선 자원봉사자들, 손수 뜨개질해 만든 팔레스타인 깃발을 매달고 소고를 두드리며 행진하는 대학생, 팔레스타인 깃발 옷을 입은 반려견과 함께 행진하는 사람들, 행진 내내 구호 박자에 맞춰 부부젤라를 부는 사람들, 동료와 제자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인증샷을 모아 들고 행진하는 교사들.

활력 넘치는 행진은 이목을 사로잡았다. 벽찬 표정으로 구호를 따라 외치는 외국인들, 박수를 치며 응원하는 시민들이 참가자들의 힘을 더욱 북돋웠다.

나들이 인파로 가득한 명동 거리를 통과하며 대열은 더 불었다. 대열이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참가자 500여 명의 표정은 한껏 상기

돼 있었다.

집회가 마무리되면서 팔레스타인 노래 'Dammi Falastini'('내 피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제목, 팔레스타인인 가수가 아랍권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부른 노래)가 나올 때는 즉석에서 흥이 넘치는 한마당이 벌어졌다. 아랍인들이 노래에 맞춰 전통 춤 '다베케'를 추자, 다른 모든 참가자들이 둥글게 모여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며 환호했다. 연대의 기운을 북돋는 축제와도 같았다.

여운이 가시지 않은 참가자들은 함께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누며 다음 집회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반년 동안 굳건히 이어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계속돼야 하고, 더 커질 수 있다. 4월 13일 오후 2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릴 제30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에도 다 함께 참가하자.

이채현·김준호

집회·행진의 발언과 현장 모습이 더 풍부하게 담긴 취재기 전문을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와 팔레스타인’ 포럼

팔레스타인 해방 전략을 토론하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된 지 꼭 6개월이 되는 4월 7일, ‘마르크스주의와 팔레스타인’ 포럼이 노동자연대 주최로 열렸다.

전쟁이 반년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이스라엘의 야만성이 널리 드러나는 한편,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계속되는 학살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지, 팔레스타인 독립의 대안은 무엇인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진 듯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전망하면서 그것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주는 함의를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였다. 발제자들은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발전시킨 제국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현재의 구체적 상황을 분석하고 해방 전략을 제시했다.

포럼이 열린 대형 강당을 가득 채운 참가자들은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활발하게 토론했다. 한국인뿐 아니라 이집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동참해 온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영어와 아랍어 통역이 제공돼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함께 토론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

모순과 위기

포럼의 첫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 정치의 극우화와 인종학살 로드맵’이었다. 중동 전문지 《미들이스트 솔리다리티》의 박이랑 공동 편집자는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의 극우는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시온주의는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민만의 배타적 국가를 건설한다는 정치 운동이다.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인의 끊임없는 저항은 이스라엘에게 충돌을 계속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겨 줬다. 팔레스타인인들을 완전히 굴복시켜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극우는 이스라엘 정치에서 계속 강화돼 왔지만, 그들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박이랑 공동 편집자는 네타냐후에 반대하는 시위도 팔레스타인 점령과 억압 자체에 결코 도전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사이의 갈등은 팔레스타인인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지를 둘러싼 것일 뿐이다.

청중 토론에서도 한 아랍인 유학생이 “이스라엘에서는 시온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가 워낙 확고”하고, “식



정치적 무기를 버리기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참가해 온 활동가들이 대형 강당을 가득 메웠다

민주의자들에게서 식민주의의 대안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2000년대 이후 중동 질서의 변화’였다. 발제를 맡은 김영익 〈노동자 연대〉 기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배경에 2000년대 이후 중동에서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추세가 있다고 짚었다.

그런 속에서 미국은 중동 질서를 안정시키려고 이스라엘의 구실을 더 중시하는 한편, 아랍 동맹국들과 이스라엘의 관계 개선을 촉진하려 했다. 하마스의 지난해 10월 7일 공격은 이런 미국의 구상을 어그러뜨린 일이었다.

김영익 기자는 중동에서 서방 제국주의가 처한 모순과 위기를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스라엘과 미국이 막강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청중 토론에서도 미국의 모순된 처지를 “상처 입은 야수”로 쉽고 명쾌하게 비유한 발언에 호응이 컸다. “상처 입은 야수”가 살아남으려고 더욱 악랄하고 극악무도해질 수 있음과 동시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약점이 있음도 함께 알아야 한다는 제기였다.

세 번째로 이원웅 〈노동자 연대〉 기자가 ‘팔레스타인 해방과 연속혁명’을 주제로 팔레스타인 해방의 대안과 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이원웅 기자는 ‘두 국가 방안’이 사기이며 이스라엘 국가를 해체하고 단일한 비종교적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미국과 협력하는 아랍 정권들

에도 도전해야 하고, 따라서 팔레스타인 해방은 아랍의 노동자·빈민 대중의 저항과 긴밀히 얽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웅 기자는 아랍 국가들의 협력을 얻어 독립 국가를 세우려는 전략을 추구하다가 실패한 파타의 전략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하마스가 10월 7일 공격을 계기로 큰 지지를 받고 있지만 파타의 노선을 계승하는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랍 혁명

각 주제마다 청중토론 시간에는 주장과 질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건설하며 맞닥뜨린 여러 물음과 고민, 그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대안에 대한 중요한 쟁점도 제기됐다. 한 아랍인 유학생과 이집트인은 ‘두 국가 방안’이 일차적으로는 현실 가능한 대안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 안에는 팔레스타인 단일 국가에서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의 공존이 가능할지에 대한 물음도 포함돼 있었다.

또, 팔레스타인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중국이나 스페인, 유럽 연합에 기댈 수 있는지,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해체된 과정과 팔레스타인 해방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지 등 대안과 전략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오갔다.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서 주변 아랍국에서의 혁명이 필수적이라는 맥락

속에서, 2011년 이집트 혁명의 경험을 돌아보는 토론도 이뤄졌다. 이집트 혁명이 열어 놓은 해방의 가능성, 이집트 혁명으로 집권한 무슬림형제단 무르시 정부의 개혁주의적 한계, 세속주의를 앞세운 군부의 반혁명에서 무르시 정부를 방어하지 않았던 이집트 좌파의 약점을 살펴보는 발언이 있었다.

이집트 혁명을 직접 경험하고 이후 군부의 탄압을 피해 한국으로 온 이집트인 난민의 발언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가지지구 봉쇄는 시온주의 국가만이 아니라 이집트 정부에 의해서도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이집트 정부가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구호물품 트럭 한 대당 5000달러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집트에서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나 성공하길 바랍니다”는 말에 모두 공감하며 큰 박수를 보냈다.

쉬는 시간에도 내외국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토론을 이어 가거나, 복도에 마련된 부스에서 팔레스타인, 이슬람, 제국주의에 관련된 다양한 서적을 구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신간 소책자 《팔레스타인: 저항, 혁명, 해방을 향한 투쟁》은 한국어와 영어판이 최근 발간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7면 광고 참고).

이날 포럼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건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무기를 제공하고 해방의 전략에 대한 고민을 더 심화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지속과 확대를 다짐하며 포럼을 마쳤다.

임준형·성지현



서평 | 《미래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우리 이제 식구네요” 아프가니스탄인 난민 울산 정착 1년

2021년 8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해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하자, 한국 정부는 자신에게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90여 명을 구출해 한국으로 데려왔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파병한 군부대, 한국 대사관, 한국이 운영한 병원 등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이다.

그중 정부의 알선으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 취업한 이들과 그 가족 157명이 이듬해 2월 울산에 정착해 큰 화제가 됐다.

신간 《미래를 먼저 경험했습니다》(김영화 지음)는 울산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인 난민들의 1년을 다룬 책이다. 저자는 시사주간지 <시사IN> 기자로, 공항 난민 루렌도 가족의 사연을 심도 있게 취재하는 등 이주민·난민에 대한 기사를 꾸준히 써 왔다.

처음에는 무슬림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아프가니스탄인 난민의 정착에 반대했다. 그러자 난민 환영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도 있었다. 울산 지역 단체 53개가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동자연대 울산지회와 현대중공업모임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일하는 공장 안팎에 환영 현수막을 걸었다.

저자는 학교·교육청·현대중공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작은도서관 등에서 아프가니스탄인 지원에 나섰던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아프가니스탄인과 주민들이 점차 교류를 넓혀 가며 편견이 허물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대박 반전”

학교 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 끝에 한국인-아프가니스탄인 학생 어머니들의 만남 자리가 마련된다. 그 자리에서 난민인 사지아 씨는 직접 장만한 아프가니스탄 음식을 나누며, 느리지만 또렷한 한국어로 준비해 간 얘기를 했다.

“이슬람은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게 교육받고 일할 수 있다고 말해요. … 우리는 탈레반이 아닙니다. … 제 딸 파르니안은 한국 덕분에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결과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 “모두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직접 만나니 풀리는 오해도 있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보다는 서로 대안을 찾아보자는 데 뜻이 모였다.”



환영의 목소리 교류를 넓히고 편견이 허물어지는 과정은 자동적이지 않았다

주민 김혜진 씨는 처음에 아프가니스탄인 정착에 반대했다. 그러나 다문화센터에서 일하는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아프가니스탄인 가정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마음이 바뀌었다.

“특히 파힘 씨의 막내가 꽤 장난꾸러기였는데 혜진 씨 첫째 딸을 ‘나연, 나연!’ 하고 부르며 졸졸 따라다니는 걸 보고 웃음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혜진 씨는 일대일 한국어 멘토링 수업에 참여하면서 보람을 얻기도 한다.

“이것만으로도 아프간 어머니들이 덜 고립될 것이다. … 스승의 날에는 감사 문자도 받았다. … 자기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의 만족감을 새삼 깨닫고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도 편견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아프간 여학생은 ‘여성스러운’ 활동만 할 줄 알았던 다운이에게는 주할이 체육 수행평가 타격 시험에서 1등을 했다는 사실이 ‘대박 반전’이었다. 예상외로 주할은 축구와 야구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다운이는 할랄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밥과 김치만 먹는 주할에게 집에서 김을 챙겨 주며 친구가 됐다.

다운이의 어머니 이송희 씨는 허접 착용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다가 “서슴없이 친해진 아이들을 보며 … 안타까워하는 시선도, 그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잠시 접어 두었다. 이게 맞으니 이렇게 하라고 강요할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아프가니스탄인들도 변했다. “1년 전만 해도

집 밖에 나오지 않던 어머니들이 요즘엔 운전면허를 따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 할 정도로 바뀌었다.”

이처럼 문화적 차이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를 둘러싼 상호 협상과 타협, 고민들도 이 책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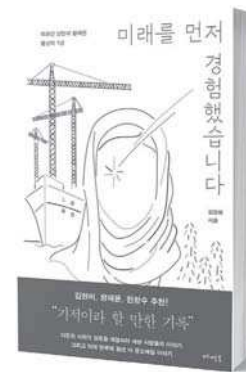
아프가니스탄인 난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인적·물적 지원이 뒷받침된 덕분이기도 했다. “한국어 교사부터 장애인 돌봄교사, 여건 개선 교사, 통역사 등 지원 인력만 90명에 이르렀다. 울산시교육청 예산으로 25억 7600만원이 쓰였고, 나중에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18억 7000만 원을 지원했다.”

다른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도 이런 지원 확대의 ‘덕’을 봤다고 한다.

여기에는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인 고(故)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역할이 컸다. 노 교육감이 첫 등굣길에 직접 아프가니스탄인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모습은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었다. “표’를 잃는 빌미가 될지도 모를 첨예한 갈등 앞에 선 정치인이 무슬림 난민 편에서 환대를 보여 준 건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난민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는 일은 예외적이다. 정부가 ‘인권 선진국’이라는 선전에 이용하려고 소수의 난민만 수용·지원하고 대다수 난민은 외면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울산의 경험을 통해 그런 지원이 확대돼야 함을 보여 준다.

이런 변화에도 아프가니스탄인 난민



미래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 아프간 난민과 함께한 울산의 1년
김영화 지음, 메멘토, 256쪽, 17,000원

들의 삶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점도 책에 담겼다. “아프간 아버지들은 조금씩 지쳐 갔다. 조선소의 고강도 노동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일이다. … 월급은 170~250만 원 정도인데 … 한국에서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엔 늘 부족한 돈이다.” 이 때문에 인천이나 수원 등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사하는 가족도 생겼다.

현대중공업 사측이 노동력 부족 때문에 이들을 채용하고 울산 정착을 지원했지만(지원을 맡은 직원들은 난민들을 진심으로 대했다), 동시에 저임금에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착취했음을 보여 준다.

아프가니스탄은 일부다처제가 인정되는 나라인데, 한국 정부가 배우자 한 명과 미성년 자녀만 데려올 수 있도록 해 생이별을 당한 가족들도 있다. 그러나 여권이 없어 여러 나라로 흩어진 가족들을 만나러 갈 수도, 본국에 남은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도 없다. 또, “울산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왜 한국 ‘시민권’(국적)이 나오지 않는지” 답답해 한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이주민 유입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이미 많은 이주민이 정착해 한국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도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인 난민의 울산 정착 사례처럼 단시간에 이주민이 늘어나는 지역도 종종 생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더욱 읽어 볼 가치가 있다. 이주민·난민과 연대하려는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임준형

의대 정원 논란

누가 더 시장 지향적인지 줄다리기는 의·정

장호중 의사, (노동자 연대)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8주째 이어지고 있다.

많은 대학병원이 일부 과와 저녁 시간대 응급실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

진료와 수술이 미뤄져 불안에 시달리던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내고 진료를 축소한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여론은 여전히 높지만, 의료 공백 장기화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자 정부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전공의 투쟁이 완강하자 마침내 윤석열 정부는 증원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전공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과의 면담 뒤 실망스럽다는 메시지를 냈다.

심지어 신임 의사협회장 임현택은 내부의 적 운운하며 박단이 면담한 것조차 비난했다. 임현택은 정원을 오히려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강경파다.

임현택은 의협비대위와도 마찰을 빚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박단과 윤석열의 만남에 대해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평가했다.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을 이어 가고 있다. 이대로 집단 유급이 확정되면 내년 신입생은 지금의 2.6배나 되는 8000명이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한다.

의대들은 수업 자료를 다운받기만 해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지만 출석하는 학생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더한층의 의료 시장화가 우려된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대책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의대 증원 방침을 지지한 까닭은 이것을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굳이 통계를 살펴보지 않아도 소아과 앞에 늘어선 줄, 피로에 찌든 전공의와 교수들의 얼굴, 3분 진료, 응급실 뱅뱅이 소식 등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

그러나 윤석열은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 인력을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게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 이제는 증원 규모를 줄이려 한다. 의대 증원 발표가 순전히 총선 용이었다는 의심을 확인시켜 주는 셈이다.

4월 4일 대국민담화에서도 윤석열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의사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모호하게 말했다.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면, 지역·필수 의료 강화에 투입하겠다는 “막대한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금껏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한 게 문제였다”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펴 왔다. 추가 재정 투입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시장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 이유다.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만, 윤석열의 의료 ‘개혁’에는 한 치의 기대도 걸어서는 안 된다.

어부지리 노리는 기회주의자 민주당

한편, 민주당은 전공의 파업 내내 어부지리 얻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던데 최근 윤석열 정부가 물러설 조짐을 보이자 의대 증원 규모 축소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이 대국민담화를 한 직후 SNS를 통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라며, 총선 이후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 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중재자인 양하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수준으로 증원 규모를 줄이려는 것인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려다 전공의 파업에 부딪혀 좌절한 바 있다. 그 조처는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 계획도 거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정부·여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물러섰는데, 당시 민주당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직후(현 21대 국회)였는데도 그랬다. 이후 국회에서 해당 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팬데믹 때도 공공병원 추가 증설 계획을 내놓지 않을 만큼 공공의료 강화에 인색했다.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노동계급에 이로운 진정한 의료 개혁을 이들에게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만, 윤석열의 의료 시장화는 필수의료 강화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다

‘필수’의료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의 구분은 현재 자의적이다.

당연히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분만실 등은 꼭 필요하다. 팬데믹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감염내과, 예방의학, 산재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산업의학도 필수의료다.

치과, 안과(백내장 등), 이비인후과(난청 등), 정형외과(관절염 등), 재활의학과 등도 필수적이고 특히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가임기 여성의 출산 관련 지원뿐 아니라 모든 여성에게 필수적인 부인과 진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트랜스젠더에게 필수적인

의료 비용과 자본주의하에서 급증해 온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심지어 피부과나 성형외과도 단순히 비필수 분야가 아니다. 피부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외상으로 인한 손상을 복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의대 증원만으로 이 모든 분야의 공백이 메워질 리 없다. 그러나 정부 계획에는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거나 기껏해야 흔적 수준으로만 있다.

필수의료만 (자의적으로) 골라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의료 자체를 필수 서비스로 여겨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공공의료 체계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공공의료 강화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의료 '개혁'을 두고 정부와 의협·전공의 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과 그것을 이룰 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2019년 12월 말 기준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 기관은 221곳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5.5퍼센트밖에 안 된다.

그중에서도 일반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은 63곳뿐이다. 나머지는 결핵, 정신병 등 특수목적 병원이거나 보훈병원, 경찰병원 등 대상자가 제한된 병원이다.

공공의료 기관은 민간병원 일색인 의료 시장의 바다 속에서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공공의료 기관도 시장 논리에 따라 민간병원처럼 운영되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공공의료기관을 민간의료기관과 같은 의료시장에서 경쟁하는 의료기관의 한 종류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은 민간기피진료 이외에는 민간병원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립대학 병원은 공공병원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 건강보험연구원, 2020)

역대 정부들은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이런 방향을 강화해 왔다.

다른 하나는 경쟁 속에서 도태돼 버리는 것이다. 지방의료원들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은 시설이 낙후되고,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앞의 글).

홍준표 같은 우파 정치인은 이 점을 악용해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

그러니 공공의료가 강화된다고 해서 과연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공공의료 기관이 제구실을 하려면 첫째, 의료 시스템 전체를 공공의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은 유럽 등과 비교해도 공공의료가 턱없이 취약하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공공병상 비율은 한국이 10.3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OECD 평균은 89.7퍼센트에 이른다(2016년 기준).

물론 45년 간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황폐화된 서유럽 의료 시스템을 아무도 이상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NHS처럼 국유화된 의료 시스템도 대중의 필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심장질환 환자 40만 명 중 37퍼센트가 진료를 받기까지 18주 이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치료가 시급한 심장질환 환자 1만 2799명은 1년 넘게 기다렸다.

따라서 둘째, 단지 소유와 운영 주체만 바뀌어서 부족하고 대대적인 국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주요 공공의료 기관이 서울아산병원이나 서울삼성병원 같은 시설과 인력을 갖춘 때에야 비로소 믿을 만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 정부와 전임 문재인 정부 모두, 심지어 팬데믹하에서조차 결코 하려 하지 않은 일이다.

투쟁과 경제 호황의 만남

영국의 NHS나 프랑스의 무상의료 체계 등이 만들어진 것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직후 격변기에 노동자들의 급진적인 투쟁과 자본가들의 필요가 맞물린 결과였다.

전쟁이 한창일 때 영국 보수당 정치인 퀸틴 호그가 의회에서 한 연설이 당시 노동계급 대중의 정서를 잘 표현해 준다. “우리가 사회 개혁을 국민에게 선사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에게 사회 혁명을 선사할 것입니다.”

한편, 영국 자본가들도 전후 재건과 소련과의 경쟁이라는 필요 때문에 복



우파 홍준표는 공공의료에 대한 대중의 낮은 기대를 악용해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

지 지출을 “최고의 장기 투자”로 여겼다. 개별 자본가 처지에서는, 큰돈 들이지 않고 부족한 노동인력을 해외에서 유인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했다. 전후 이어진 장기 호황은 이런 투자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했다.

그러나 오늘날 장기 불황 속에서 세계 자본가들은 의료 지출을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지 지출을 삭감해 기업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 저항 잠재력 약화를 위해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긴다.

하물며 해방 이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시장 지향적으로 구축된 한국의 의료체계를 공공의료 체계로 바꾸는 일은 결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부드러운’ 과정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공공의료 중심주의 의료 체계 전환 시도는 영국의 NHS 도입 당시와 달리 자본가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게다가 1990년대 이후 더욱 강화된 의료 시장화는 다수 의사들을 공공의료 확대에 강력히 저항하는 세력으로 만들어 냈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의료를 조금 강화하려 할 때조차 그들은 강력하게 반대해 좌절시켰다.

정부는 그들의 저항에 대처할 수단(효과적인 공공의료)이 없었고 지금 윤석열처럼 대중의 고통을 방지할 뿐이었다.

따라서 공공의료 확대 요구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혁명적이지는 않지만, 그 요구를 실제로 성취하려면 수많은 대중의(준)혁명적 투쟁이 필요하다.

그 투쟁 속에서 사람들은 기존 소유 관계를 변혁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대규모 투쟁 속에서는 많은 의사들의 의식도 변할 수 있다. 1987년 6~8월 대중 투쟁은 비록 혁명적 투쟁은 아니었어도 노동자들의 정치적 투쟁과 경제적 투쟁이 잇달아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급진화하고 의사와 의대생의 적잖은 일부가 급진화한 바 있다.(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같은 급진 의사 단체도 그 토양 위에 설립됐다.)

혁명적 좌파는 공공의료 확대 요구를 그런 격변 속에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는 전환적 요구로 자리매김하고 지지해야 한다.

현재의 다중·복합 위기를 고려해 보면, 지금은 그런 격변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인 듯하다.

장호중 의사 <노동자 연대> 기자

▶ 16면에서 이어짐

고·감염병 유행 등 위기의 순간에 국가 자본가 계급의 사정부터 걱정한다. 또, 국가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사회 질서에 대중이 쉽게 항의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억압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막을 수 있는 참사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이윤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사회와 그런 사회를 억압적으로 유지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우선순위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우선순위에 맞서 정치·경제적 투쟁들이 성장해야 하고 연결돼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윤석열 정부하에서도 당연히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등

정부의 악행이 낳은 참사들을 덮어 버리려 하고, 경제 위기의 비용을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떠넘기고 있다.

열 번째 4월 16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잊지 않겠다”는 다짐은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으로 향해야 한다.

김승주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배경(특히 제주 해군기지행 철근 문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십시오.

▶ 세월호 참사 7주기, 참사는 왜 일어났고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 10년, 어떤 교훈을 남겼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곧 10주기를 맞는다.

참사가 벌어진 지 10년이 흘렀지만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의 슬로건이었던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외침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이 점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라는 대형 비극으로 가슴 아프게 상기됐다.

겉보기에 멀쩡하던 배가 안에서 쌓이고 굶은 적폐들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가라앉아 버린 세월호 참사는 겉보기에 멀쩡한 줄 알았던 이 사회가 사실은 완전히 뒤집힌 우선순위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 순간에 드러낸 사건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단지 우연이나 음모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직접적인 참사의 주범은 비용 절감과 규제 완화를 앞세운 세월호의 선박 회사 청해진해운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였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친제국주의 정책 또한 핵심 배경에 있었다.

참사 당일 세월호에는 제주 해군기지 행 철근이 승객 5000명 해당하는 무게인 400톤 이상, 그것도 부실하게 묶인 채 과적됐다. 이것이 배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쏟아져 내려 복원성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요인이었다.

참사 직후 보인 정부와 경찰의 우선순위 또한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비용 절감과 사회 질서 통제(억압)에 있었다. 세월호 침몰과 동시에 시작된 유가족 감시, 항의 운동에 대한 사찰과 탄압은 사람들을 더욱 울분 터지게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는 사회가 굴러가는 방식 전반에 대한 분노와 ‘국가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저변에서, 특히 학생과 청년층 사이에서 일깨웠다.



인양된 선체 10년 전, 304명의 희생자들이 여기 갇힌 채 속수무책으로 가라앉았다

그런 분위기는 더 큰 정치 투쟁이나 사회경제적 투쟁들로 이어질 잠재력 또한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은 박근혜 퇴진 요구를 가장 처음으로 내건 운동이었다. 세월호 운동은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 등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에 맞선 여러 투쟁들에 영향을 미쳤고, 이 운동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으로 모였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은 세월호 참사가 낳았던 파장을 악몽처럼 기억한다.

사실 세월호 참사 주범 정당 새누리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은 2021년 참사 7주기부터 공식 추모 행사에 지도부가 참석하며 유가족 위로 운운, 더 안전한 대한민국 운운해 왔다.(아마 올해도 참석할 것이다.)

그러나 2022년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자 그들의 본색은 여과 없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와 우파들은 세월호의 ‘악몽’에 몸서리치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고 참사를 어떻게든 지우려 들었다.

책임자 처벌

참사 문제의 정의 실현은 책임자 처벌부터이건만, 아직도 세월호 구조 방지 혐의로 처벌된 사람은 123명정도의 한 명뿐이다.

책임자 처벌 등 세월호 참사의 해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참사 이후 10년 중 문재인 정부 5년에 해당하는 기간의 문제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검찰 재수사에 서도 유가족이 처벌하라고 요구한 책임자 78명(황교안, 우병우 등 청와대 책임자와 해경 지휘부 등) 대부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1심에서 불구속 기소된 해경 지휘부 10명은 법원에서 전원 무죄 및 집행유예를 받았다.

결국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11월에 이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

문재인 정부는 원 수사의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검사들을 대거 승진시키기도 했다.(관련 기사: 현 정부 최고 요직에 앉

은 세월호 적폐 검사들 — 알고 보니 노무현 정부 출신, 문재인 측근)

문재인 정부는 유가족이 원하는 대통령 직속 진상 규명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삭발을 하고 단식 농성을 하며 싸워야 했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의 진정한 배경인 친기업적 신자유주의 정책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됐다. 그래서 인재형 재난과 참사 또한 반복됐다.(관련 기사: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 배경이 된 친기업·친제국주의 국가 운영 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세월호 항의 운동을 돌아보건대,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중시하는 주류 정당 또는 그 정부에 의존해서는 참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안전 사회 건설을 할 수 없다. 이 교훈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체제의 우선순위

세월호 참사는 그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배경인 이윤 경쟁과 비용 절감 논리, 그에 따라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내팽개치는 체제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한 해에 산업재해 사고로만 500~8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그 중 대다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지키는 투자만 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을 것이다. 세월호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기업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대중 안전, 공공의료, 방역 체계에 투자할 책임과 능력은 국가에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 하에서 국가와 자본은 공생과 상호의존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 공황·화재 등 대형 사

▶ 15면으로 이어짐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 60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온라인 토론회

이스라엘 반정부 시위 분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의 한 축이 될까?

4월 24일(수) 오후 8시
발제 롭 퍼거슨

시온주의에 반대하는 유대인으로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해 왔다. 영국 전쟁저지연합 전국 운영위원, 팔레스타인연대캠페인(PSC) 활동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

※ 전문 통역사의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참가신청 bit.ly/0424-meeting

최근 이스라엘에서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가자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노동계급과 좌파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시온주의에 반대하는 유대인 활동가인 롭 퍼거슨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현실을 살펴보고 이런 주장에 답하고 변화를 가져올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다룰 것입니다.

